

IMF 관리 체제 반년 점검

IMF체제와 한국경제의 개혁

정태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갑 자기 분주해졌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는 분업의 원리에 따르면 경제학자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많은 얘기가 쏟아지고 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이 차원의 이야기와 저 차원의 이야기가 섞여서 혼란스럽다. 물론 나는 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능력이 없다. 각 차원은 자기 나름의 논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는 모두 합쳐 하나겠지만 현실을 하나의 논리로 꿰뚫을 수는 없다. 각각을 하나의 논리로 설명하고 연후에 그 논리를 엮어야 한다. 이렇듯 복잡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실천이다. 그러므로 실천에 관한 이야기는 아무리 단순한 하나의 방향일지라도 엮어진 논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논리에서 도출되어서는 안된다. 만일 실천을 염두에 둔 글이라면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금, (특히 노동계에) 뿌려진 글들은 하나의 논리로 하나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다.

1. 국제금융자본의 이동과 IMF

전 세계에 유령이 돌아다니고 있다. 금융자본이라는 유령이다. 이들은 각국의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한다. 문제가 생기면 아주 손쉽게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 간단하게 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 현재로서는 아무도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이른바 세계화(globalization)의 진정한 주체이자 수혜자이다. 이 유령이 살고 지나가면 폐허만 남는데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 1992~3년 유럽(특히 영국), 1994~95년 라틴 아메리카(특히 멕시코), 현재 동남아시아와 한국이 그렇다.

IMF가 후원하는 것은 금융자본이다. 피해자들이 빚더미에 쌓여 돈을 못 갚을 지경에 이르면 IMF는 마치 해결사처럼 결국 빚을 갚게 만든다. 감시 기능 없는 최후의 대부자, 이것이 IMF의 실체인 것이



IMF사태는 노동조합운동에 새로운 요구를 던지고 있다. 투쟁과 참여, 요구와 대안제시의 적절한 구사가 필요하다

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에서 틀에 박힌 듯이 되풀이되는 IMF의 고금리정책은 그야말로 쓴 약이다. 모든 약한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환자의 상태에 관계 없는 만병통치약인 개방화도 빠지지 않는다. 이제 한번 약점을 보인 나라는 완전히 별거벗은 채 금융자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벗어난 길은 있는가?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 상황을 볼 때, 국제 금융위기는 조만간 닥칠 것이다. 세계화(global) 시대의 '민족경제론'이 시급한 시점이다.

근본적인 치유는 물론 금융자본에 대한 국제 규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 존재조차 선불리 부정당하고 있는 국민국가들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제금융위기에 호되게 휩

쓸리고 난 후에야 그런 제도상치가 마련될 것이다. 20세기 자본주의의 역사는 그러한 불행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중심이 아닌 변방의 국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언제나 힘의 균형을 이용해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것이다. 미국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 대만을 잇는 아시아 지역경제권을 구상해 움직인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일본의 정책이 미국이 고여놓은 금융 결코 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지도 모른다. 그러나 발상의 전환은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 중국 대만 일본이라는 거대 독자국이 있으므로 정치의 힘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2. 한국경제의 위기와 IMF체제

(1) 도덕적 해이와 금융공황론

세계 전체를 금융위기에 몰아 넣을 가능성이 큰 지금의 아시아 금융 위기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미국 경제학자인 크루그만과 삭스의 논쟁이다. 사실 둘은 대체로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다는 데 동의한다. 다만 위기의 원인이 팡글로스 밸류(Pangloss value; 원래는 볼테르의 소설에 나오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 팡글로스 박사에서 따온 것으로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에 현혹된 투자, 즉 거품의 소멸(크루그만의 주장)인가, 아니면 단순한 금융공황(삭스의 주장)인가에서 갈라질 뿐이다.

크루그만의 이야기는 그가 의도했던 안했던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정부보증에 따른 기강 해이(moral hazard; 보통 '도덕적 해이'로 번역함)는 정부가 예금의 반환을 보증해 주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대출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미국의 S&L사건 이후 은행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되고 있다. 즉 크루그만은 한국 은행들이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대출을 무릅쓴 결과 거품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꺼지는 것은 언제나 필연이므로, 이번 위기는 언젠가 반드시 일

어날 일이 우연히 외환위기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아시아의 성장을 단지 외형 투자를 증가시켜 성장한 것이라고 깎아 내린 과거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밑에서 밝히는 것처럼 제도적 불일치가 없었다면(혹은 과거와 같은 '조정'이 가능했다면), 장기 투자의 증대가 학습효과에 의해서 일정한 효율을 얻을 가능성이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한국의 경우 단순한 거품의 붕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크루그만의 주장은 이번 위기 대해 외국은행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사실은 크루그만의 주장은 외국은행에 대해 더 잘 들어맞는다. 이러저러한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는 한국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그들이 몰랐을 리 없는데도 경쟁적으로 한국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무지하거나 혹은 한국 정부의 암묵적 보증에 기대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 이야기는 IMF까지 집어넣어 더 확장할 수 있다. 외국은행은 IMF의 절대적 보증을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즉 제2의 기강 해이(moral hazard)인 셈이다. 고정환율제의 관리자에서 국제 부실 채권의 해결사로 나선 IMF야말로 기이한 존재이다. 감시기능은 전혀 없이 최후의 대부자 역할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금융의 투기적 대부를 항상 조장하는 일일 것이다.

반면 삭스는 어느 누구도 위기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번 위기

가 금융공황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에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자본의 이동이 대출 회수를 가져왔고, 이것이 공황 상태로 시장을 몰아넣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 관한 이들의 논쟁은 IMF 처방에 관한 비판과 옹호로 이어진다. 삭스는 IMF가 위기를 막기는커녕 조장했다고 본다. 부실 은행은 언젠고 정리되어야 하지만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그것을 강요한 것은 위기를 심화시켰을 뿐이고(self fulfilling creditor run), 은행 재자본화에 대한 요구도 대출회수를 통해 산업을 위축시켰으며, 있지도 않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것을 요구한 것도 경기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신용의 양적 제한은 위기를 촉발시키는(이런 사실 너무 강한 주장이지만) 역할을 했을 뿐이며, 고금리는 은행과 기업의 수익성을 잠식함으로써 경제가 침체할 것이라는 예상을 형성시켰고, 이것이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본 유출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반면 크루그만은 IMF의 지원 부족, 정치적 자원의 부족 등을 들어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IMF에 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견해가 있을 텐데 첫째는 크루그만과 같은 현명한 정책, 혹은 어쩔 수 없는 선택론, 둘

째는 삭스와 같은 IMF 무능론, 셋째는 IMF 음모론(학자의 세련된 비전으로는 크로티의 글이 있다) 등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으로는 무능론이 현실에 가깝다. 다만 IMF의 목적이 국제 금융자본의 보호(좋게 얘기하면 국제금융위기로의 확산

을 막는 것)라면 몇 개의 가능한 선택지 중에서 그들이 해당국과의 협상과 정에서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크루그만의 주장이 쉽게 재벌 개혁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자유주의/시장주의적 개혁론

자들이 이 입장을 택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왜 이들이 IMF 정책에 그리도 집착하는 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아시아 나라들이 현재의 위기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편파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발상이다. '빛진 놀이 무슨 말을 해?'라는 시각이야말로 위기를 올바르게 수습하는 길이 아니다. 독일에게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물어 지나친 배상을 요구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돈 뜻 값을 기업에 돈을 빌려준 외국 금융기관 역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러한 국제적



규칙이 확립되어야만 현재와 같은 과잉유동성도 제약될 것이다.

다음으로 IMF 처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고금리 정책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사스의 설명이 더 유효하다. 고금리에 의한 자본유입 요인보다 위기의 심화에 따른 자본 유출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스의 설명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시아 각국의 '구조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크나큰 한계를 가진다. 금융공황임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도 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그리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수익성 지표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외부와 내부의 원인은 어떻게 연결되었던 것일까?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가장 고질적인 것은 '원론의 관철'을 증명하려는 자세이다. 물론 옳은 방법이지만 한데 문제는 관철의 양상에 눈감는다는 데 있다. 누가 이번 위기에 대해 써야 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왜 그것이 외환위기로 닥쳐왔는가를 해명해야 한다. '과잉생산과 이윤율 저하'를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들 안에서는 항상 옳겠지만, 그것이 외환위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훨씬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주장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1년 전까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단순한 이데올로기

공세라고 주장하다가), 불과 몇 달 만에 '대위기-대투쟁'을 선포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한국 경제 자체는 과잉생산이 아니었지만 세계 차원의 과잉생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닥쳤다는 논리도 현실성이 없다. 지금은 원론적인 해석보다는 현실에 근거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원론'에 사로잡혀 '파멸적인' 실천전술을 끌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 제도주의적 설명

나는 이전의 축적체제에 민간의 해외 자본 조달이 끼어든 데서 온 제도적 불일치가 이번 위기의 직접 원인이라고 본다. 재벌체제가 이끄는 중화학공업투자가 주도한 성장은 언제나 '과잉투자' 경향을 가지며, 이것이 주기적으로 부실화의 원인이 된다. 과거의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에 의해 부채를 탕감해주거나(즉, 국민의 세금에 의한 부채 탕감), 은행이 부실 채권을 떠 안아 장기투자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돈을 퍼붓는(단위자본의 수익성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가 어느 정도 효과(effective)를 거둘 수 있었다.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가가 비경제적인 방식으로 자본 재편을 하고, 그 부담을 은행과 국민이 떠 안는 비상 수단도 동원되었다. 실제로 5공화국 초기에 한국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악명 높은 서빙고 보안사 분실이었다.

만일 제도라는 것이 경제주체들의 행동

양식, 혹은 관행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제도주의적 설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국내의 금융관행과 실제 자본 조달원의 행동양식 사이의 괴리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1994~1996년 사이에 외국의 민간자본을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가 들여와서 장

기부자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조정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과거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는 외환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른바 경제의 기초체력(fundamental)이 과거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촉발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과거에는 계

쇄된 울타리 속에서 가치를 잃고 만 돈(인플레이션에 의한 감가)이 이번에는 빠져나가 버린 것이다(평가 절하). 단기 차입과 장기 용자간의 괴리(mismatch)는 그 현상 형태일 뿐이다.

담보 대출 관행도 과거의 조정양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부실 채권이 되더라도 담보의 자산가치 상승은 은행의 급속한 자본잠식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 제약으로 인해, 그리고 IMF 처방에 의해 인플레이션 정책이 불가능해지면서(따라서 인플레이션 기대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자산 가치마저 하락하게 됨으로써 은행부실-채권회수-기업도산-부실채권 누적이라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에 김영삼 정부의 정책 오류가 덧붙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 단기적인 오류를 많이 지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노태우-김영삼 정권 시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경제구조와 정책방향에 문제의 뿌리가 있다. 자유화가 재벌의

힘을 강화시킨다면 기존의 축적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은 강화하면서(이 또한 재벌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지만) 개방화를 진행시켰다는 것은 국내 구조와 국제 환경간의 괴리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시장의 힘'에 맡긴다는 명목으로 괴리를 확대해 나갔을 뿐

이다. 관료에 의한 개별통제라는 이전의 감시체제 역시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시장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세뇌시킴으로써 자진하여 통제를 포기하면서도 대안적인 조절양식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었던 것이다.

3. 한국경제의 개혁방향

그럼 만신창이의 한국경제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은 모든 것이 '부르주아' 프로젝트일 뿐이라며 비판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정확한 상황관단과 구체적인 현실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개혁 문제를 다뤄야 한다. 어

지금도 일반적인 위기보다는
현실이 근거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때이다. 결론이 시로잡혀
과잉적인 실연 전승을 끊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졌든 지난 2월 재정경제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곤혹스러움을 적나라하게 토로했다. “(시장에) 맡겨 놔더니 제대로 되는 거 같지 않아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은, 그대로 놔두기만 하면 제대로 되기 마련이라는 ‘추상적 시장’과 ‘현실 제도’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 시장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작동해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상황이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다’고 믿을 만큼 안정적인 여러 제도를 전제로 해서만 시장은 비로소 그럴듯하게 작동한다. 그러한 하나의 체제가 무너졌을 때 새로운 제도를 세우는 것은 국가의 몫일 수밖에 없다. 시장 스스로가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좀 과장하자면 지금은 시장에 맡길 때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

재벌에 의해 이뤄지는 장기 투자는 아직도 한국 경제의 주요 부분이다. 그러나 이제 누가 돈을 댈 것인가? 시장주의자들은 재벌에게 은행을 맡겨서(재벌의 은행 소유) 해결하자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현재의 문어발식 경영을 온존시키는 하책(下策) 중의 하책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의 ‘환란(煥亂)’은 필연이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나의 사업에 몰두하는 대기업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모든 재벌을 무너뜨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그리고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의 ‘개혁’

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사고이다).

물론 그냥 권력을 휘두르라는 얘기는 아니다. 예컨대 재벌의 그 많은 빚을 주식으로 바꿔서 은행이 소유하게 하는 것은 은행의 시급한 부실채권 처리, 그리고 재벌 통제에도 도움이 되고 재벌 스스로 전문 대기업으로 살아나가게 하는 길일 것이다.

은행이 스스로 서게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존하는 금융체제로 얘기한다면 독일식과 일본식의 절충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과 미국 방식의 금융 제도는 광범위한 자본시장(주식, 채권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현재 한국의 산업체제와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토니 블레어의 핵심 참모인 허튼(Hutton)이 영국 씨티(금융자본의 아성)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일본/독일형 은행제도를 참고하자고 역설하는 것에 귀기울일 만하다. 영미식 자본주의에서는 장기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시장, 즉 주주가 기업주를 통제한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 수많은 주주 가운데 누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업주를 주주 총회에서 통제하는 힘든 일을 감당하려고 할 것인가? 이른바 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영미식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은 완전히 별거벗은 채 현재의 국제적 불안정성에 몸을 내맡기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독일의 유니버설 뱅킹제도나 일본의 주거래은행제도처럼 은행이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자신의 대출회수권을 이용해서 기업을 통제하는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이 은행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과잉투자가 항상 일어난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은행은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원'들이 소유와 통제를 해야 한다. 모든 통제의 기본은 내부 통제여야 한다. 이른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이것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현재의 제도에서 노동조합에 그러한 통제 임무가 일부 맡겨져야 한다. 이것은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강력한 효율적 방법(감시비용의 절감)이다.

나아가서 노동조합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스스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경영에 참여할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의 효율성 향상도 보장할 수 있다.

큰 밑그림에 동의해서 국민이 스스로 참여할 때에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과거의 강제동원에 대비해서 '민주적 동원'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동원에 의해서만 기존 이익집단의 저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 재벌과 보수 정치세력의 구미를 맞추면서 발본색원의 개혁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즉 국민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기존 구조를 개혁하고, 그 힘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살길이다. 그리고 그 참여는 새로운 경제의 운영원리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노사정위원회는 중요한 제도일 수 있다. 현 정부가 외자 유치를 위해서 '장리레고제'를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위원회를 활용하는 한 한 국경제의 회생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노동자와 국민의 힘을 이용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제압해야 할 것이고, 온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운 축적 체제를 만든다는 관점을 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내부 금융, 모든 조직의 내부 통제에 의해 균형을 맞춰 가는 경제, 이것이 글로벌 시대의 민족경제가 갖춰야 할 기본 원리인 것이다. ♦

노동조합은 단순한 감시를 넘어서 스스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경영에 참여할 때 비로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의 효율성 향상도 보장할 수 있다.